

#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안전대책

## Counter-terrorism Safety Measures in Public Facilities

김 두 현\* · 안 광 호\*\*

### <목 차>

I. 서론	IV. 한국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안전대책
II. 이론적 고찰	V. 결론
III. 한국 다중이용시설의 테러환경 및 대비실태	

### <요 약>

9.11테러사건 이후 테러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경성표적에서 연성표적인 지하철, 백화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동시다발 테러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국제기구 등 4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금년 7월에 아프간 350명 이내의 치안지원군 추가파병을 앞두고 국제테러조직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 APEC, ASEM, 2002 한·일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테러방지법의 조기입법, 부총리급의 대테러센터의 장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기관리시스템 정립과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건축적 대처방안과 신종 IED위협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테러현장에서의 경찰과 소방기관의 초기대응태세 확립 및 사경비회사의 근무체제 확립을 위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국민 테러위협의 인식변화와 홍보·교육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테러의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테러위해 인지능력배양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3D SICS와 같은 과학적인 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건강복지학부 안전관리학 교수(제1저자)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교신저자)

이와 같은 요소를 보강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보여 진다.

주제어 : 다중이용시설, 초국가적 테러, 테러환경, 연성표적, 테러 안전대책

## I. 서론

우리 대한민국은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경제의 선진화라는 튼튼한 기반위에서 우리가 국제 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역으로 당당히 올라섰음을 뜻한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국제기구 단체 등의 회의를 함께 열게 됨으로써 사실상 40여개 국가의 경호대상자가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와 미국이 내년 상반기 까지 아프가니스탄에 3만 3천명을 추가로 파병하겠다는 방침이고(‘동아일보’. 2009. 12. 5: 6, 14) 그 우방국인 한국도 금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 지방 재건팀(PRT)을 350명 이내로 추가파병을 앞두고 있어 탈레반 테러조직, 북한 등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민일보’.2010. 2. 10: 6).

기존의 테러는 항공기 납치·폭파, 요인암살 등과 같은 전통적인 테러형태였으나, 2001년 9.11테러사건<sup>1)</sup> 이후 테러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경성표적에서 연성표적(soft target)인 지하철, 백화점, 관광호텔, 고층빌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동시다발 테러양상을 보이고 있다(김두현, 2005: 1).

한국민이 해외에서 테러를 당한 환경을 보면 2004년 이라크 알타우히드 알지하드가 우리 기업인 김선일씨를 살해한 사건과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봉사단원 납치사건 등 10여 차례 크고 작은 테러사건으로 한국민도 이제는 국제테러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겼고 지금도 국제테러로부터 기업인 및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신변안전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국내지역에서도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비롯하여 1983년 버어마 아웅산 폭파 사건, 최근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과 서해 5도교전 등을 통해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때, 국내의 테러환경은 북한의 특수공작원에 의한 테러발생 가능성, 오사마 빈라덴의 미국의 우방국이자 아프가니스탄 파병국가인 한국을 테러할 가능성, 국내 좌경세력과 연계한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내외 테러환경에서 우리의 대비 실태를 보면 1982년 1월 21일 대통령훈령 제 47호<sup>2)</sup>에 의거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9.11테러 이후 조속히 테러방지법이 입법화

1) 9.11테러는 항공기의 납치·폭파에서 식사용 나이프와 포크를 이용하여 비행기를 탈취한 후 비행기를 폭탄으로 사용하는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기발한 발상을 실현시킨 사건이다.

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표류 중에 있으며, 테러에 버금갈 정도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의 위기관리에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생화학테러가 발생할 시에는 단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초기대응과 테러 안전대책도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개념 및 현황, 국제테러의 개념 등의 이론적 검토를 한 후 초국가적 테러확산 원인 및 전망과 한국에서의 다중이용시설의 테러환경 및 대비실태를 분석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다중이용시설의 개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대도시는 건축기술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건축기술의 발전은 도시구조의 고도화, 집중화현상,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다변화 현상 등과 맞물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도시, 건축 공간에서의 변화를 낳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유형이 다양할 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도 도심의 밀집화, 대형화, 복잡화, 지하화, 초고층화 라는 뚜렷한 변화추세를 보여주면서 복잡한 형상을 가진 다중이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바닥면적, 층수 등에 의해 다중이용건축물이라는 것을 지정하여 설계에서 건설까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2.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종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다(박철기, 2007: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2) 이 훈령은 1982. 1.21일자로 제정되어 그동안 1997. 1. 1, 1999. 4. 1, 2005. 3. 15, 2008. 8. 18, 2009. 8. 14 등 5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다.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②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④ 「항공법」에 의한 공항 시설 중 여객터미널, ⑤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대합실, ⑥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⑦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⑧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⑨ 실내주차장, ⑩ 철도역사의 대합실, ⑪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⑫ 그밖에 대규모 점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다(법제처, 2009: 241-243).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①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상 산정한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② 영화상영관·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 ③학원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것,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상기에 규정된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④ 목욕장업으로서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⑤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⑥ 노래연습장업, ⑦ 산후조리업, ⑧ 고시원업, ⑨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법제처, 2009: 905-917).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표 1>에서와 같이 2007년 현황을 보면 2006년 대비 7.3%정도 증가한 추세에 있다.

<표 1> 전국 다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자동차여객터미널	공항터미널	항만시설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07년	6868	468	64	22	17	4	139	55	16
06년	6398	456	64	23	14	4	132	52	15
증감	+470	+12	.	-1	+3	.	+7	+3	+1
구분	의료	실내주차장	철도역사	대규모점포	국립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국립보육시설
07년	1168	2647	19	961	107	90	946	101	44
06년	1071	2429	17	935	88	88	908	77	25
증감	+97	+218	+2	+26	+19	+2	+38	+24	+19

출처: 환경종합 서비스(www.me.go.kr)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실내주차장, 의료기관, 찜질방, 산후조리원 시설은 증가하였으나, 테러위험이 되는 지하역사, 공항터미널은 <표 1>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태이다.

### 3. 초국가적 테러의 확산원인 및 전망

#### 1) 초국가적 테러의 확산원인

20세기가 끝나면서 냉전기에 잠재되어 있던 민족·종교·영토분쟁이 분출되고 대량살상무기와 국제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김두현, 2007: 278). 테러의 목적도 종교적·정치적·민족적·군사적·경제적 이익 도모 등을 위해 테러의 수법과 방법에 있어서도 전통적 수법(요인납치, 암살, 살해, 폭파, 방화 등)과 현대과학기술에 따른 최첨단 무기(미사일무기, 전자전무기, 레이저무기, 사이버무기, 생화학무기 등)를 이용한 새로운 테러와의 배합으로 불특정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동시다발 테러로 변모하고 있다(김두현, 2007: 186-277).

이와 같이 국제적 테러가 확산된 이유와 테러리스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대중 언론매체인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및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범의 목표, 이념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하여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테러범을 테러 범죄로 보지 않고 영웅화시켜 테러행위의 가담을 조성하고, 나아가 테러정세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테러를 문제해결의 최후수단으로 보는 시각의 존재이다. 넷째, 테러를 국가의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최진태, 2006: 50-53).

## 2) 초국가적 테러의 확산전망

국제테러는 1960년대 극좌 및 PLO계열의 테러조직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국제테러가 태동한 이래 1970년대에는 구주지역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극좌 테러가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에는 이념보다는 소수민족 분립이나 종교에 기인한 테러가 빈발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알카에다가 활동역역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이슬람 과격세력의 테러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국제테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김응수, 2008: 81).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2001년 10월)’을 선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알카에다 와해를 위해 아프간을 공격하면서 2002년에는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듯 했다. 그러나 2003년에 들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연장선상에서 이라크 전을 시작하자 알카에다를 주축으로 한 이슬람 과격세력들이 이라크로 집결하여 지하드의 전초기지를 삼아 파병국가 등을 대상으로 테러 공세를 강화하면서 테러의 증가양상을 보였다(이창용, 2007: 110).

### (1) 불특정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테러위협 증가

전통적 테러는 특정 인물의 제거 또는 암살 등 희생자와 비희생자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했던 ‘선택적 테러’에서 오늘날 일반대중을 살상하는 ‘보편적 테러’로 점차 대체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2007년 4월 미 의회에 제출된 국무부 테러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세계적으로 민간인 74,543명을 목표로 총 14,338건의 테러공격이 발생해 20,49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었다(US, Department of State, 2006, 2007).

이와 같이 현대의 테러는 일격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사회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극도의 공황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일거에 전쟁수준의 사상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상황이 종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테러의 양상은 수 개국에 걸친 테러 세포조직들이 가담하는 초국가적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 (2)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위협 증가

국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관련 상황은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병원, 역사, 공항 등에 폭발물설치 협박(2006년 65건)이 대부분이며 최근 10년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형사고(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서울삼풍백화점 붕괴, 화성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인천지하노래방, 대구지하철 화재)가 대부분 폭발 및 방화 등에 의한 화재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이경훈, 2009: 112). 해외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국제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 중 약 70%가 민간시설물이며 다중이용시설 전체 테러 중 50%가 폭탄테러이다. 2001년 9.11테러와 2004년에 발생한 북 오세티야 소학교 인질극 테러사건은 초대형 메가테러의 사례로 주목된다.

이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연성목표물(soft target)에 테러가 증가한 이유는 강력한 대 테러시스템이 부재하고 시설에 대한 방호가 취약하기 때문에 접근과 공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테러행위에 수반되는 사용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권혜림, 2009: 42).

(3) 불특정다수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테러위협 증가

무차별적 동시다발 테러형태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9.11 테러사태와 같이 차량폭탄, 항공기 폭파, 대중교통수단, 다중이용시설, 학교, 병원, 노변폭탄 등 매우 다양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자행 할 것이다.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세계 테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49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에는 3,217건이나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의 경우 테러유형은 폭파(1,630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무장공격(1,343건), 인질납치, 암살의 순으로 발생하였다(박동균, 2009: 32).

<표 2> 연도·유형별 세계 테러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497	809	988	1,896	2,886	3,426	3,217
폭 파	226	357	487	1,111	1,569	1,649	1,630
무장공격	216	310	323	548	1,030	1,510	1,343
암 살	20	64	51	101	114	83	17
인질납치	13	17	115	96	103	156	199
교통수단납치	3	3	2	4	1	3	0
기타	19	58	10	36	69	25	28

\*출처 ;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5) 인터넷·매스컴(TV, 신문, 라디오)·비디오 등을 이용한 테러위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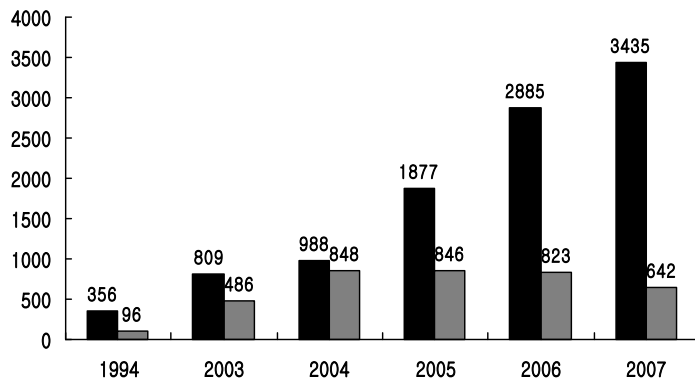
테러사건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잔혹한 폭력행위를 전파하고 확산한다. 특히 서구 언론을 포함한 자본주의 체제하의 언론의 경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주제들을 더욱 선호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언론, 방송의 이러한 속성을 간파하고 언론, 방송을 이용해 자신들의 존재를 외부의 세상에 알릴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김두현, 2007: 300-301). 특히 2004년 6월 한국인 김선일씨를 살해한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유일신과 성전’ 이라는 테러조직이 참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비디오에 담아 웹사이트에 공개해 전 세계를 참수의 공포감으로 떨게 한 일이 있었다.



(6) 신종 IED를 이용한 테러위협 증가

신종 급조폭발물(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에 의한 테러는 자살폭탄 공격이다. 미국 RAND 연구소에 따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1994년에는 356건의 테러가 발생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테러의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림 1> 테러발생 건수 및 사망자



\* 출처 :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www.nis.go.kr)

특히 미국 주도하 아프간, 이라크 전쟁 이후 현지 민군작전이 계속되면서 2005년부터는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초국가적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04년 988건 발생에 8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라크 현지를 포함한 도처에서 급조폭발물(IED)을 활용한 자살폭탄테러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며 국제공조체제가 강화되면서 2007년도 3,435건 중 1,468건이 중동지역에서 1,353건이 아·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2006년과 2007년은 테러의 속성상 발생건수도 많이 증가했지만 총 사망자 중 IED에 의한 사망자가 50%를 상회하였다(김웅수, 2008: 8).

자폭테러를 자주 저지른 테러단체로는 2001년 9·11테러사건을 일으킨 알카에다, 팔레스타인 계열의 하마스나 이슬람 지하드, 레바논에 근거를 둔 헤즈볼라, 타밀엘람 해방호랑이, 체첸반군, 제마 이슬라미야(JI) 등을 들 수 있다. 단일단체로 볼 때는 테러건수에서는 타밀엘람 해방호랑이가 가장 많지만, 알카에다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34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50개국 이상의 국가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임철순, 2003: 104-105).

### Ⅲ. 한국 다중이용시설의 테러환경 및 대비 실태

#### 1. 다중이용시설의 테러환경

21세기 국제테러는 특정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극렬테러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특히 테러리스트에 의해 납치되어 살해된 김선일씨 테러사건과 이라크 파병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알카에다 테러조직이 2009년 3월에 예멘테러, 2009년 1월에 러시아 모스크바 '부쉬킨 언어대학교'에서 발생한 액체인화 물질분사사건, 2008년 11월 발생한 인도 몸바이 연쇄테러사건, 2007년 아프간지역에서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사건 등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한국의 테러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최진태, 2004: 2).

##### 1) 국내의 테러위협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우리는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의 혜택을 입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 간 빈부격차에 직면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경기침체 속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절대빈곤층과 청년실업자의 해소대책의 미비로 실업률 증가 등은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생적 불만세력이 형성되면서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김두현, 2007: 290).

기존의 테러는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경성목표물을 주로 삼았으나, 현대의 테러는 연성목표물인 지하철, 백화점, 관광호텔 등과 저항능력이 없는 초등학생들을 포함하여 불특정 일반 시민들을 테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는 연성목표물에 대한 테러는 그동안 없었으나, 향후 대구지하철 방호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계화 시대의 FTA 등 무역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집단이 반미나 민족주의 등을 앞세워 국내 정치인이나 관공서, 국내주재 외국인이나 공관,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테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동균, 2009: 31).

특히 2000년도부터 제3국을 통하여 대량으로 탈북한 자들의 국내입국으로 2009년 말 기준 1만 7,700여 명이나 1~2년 이내 2만 명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다(www.naeil.com).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한 사회적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차후 이들의 집단화가 된다면 사회적, 정치적으로 자생적 극단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탈북자 및 월남 귀순자에 대한 정착 준비시설이 테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김두현, 2007: 290).

## 2) 북한의 테러위협

북한은 오늘날까지 정권유지를 위해 대내적으로 폭압적 테러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 12월 화폐개혁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긴장 관계가 군사력 과시를 통한 위기국면 조성을 통해 국가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테러를 전담하여 테러를 자행해 왔다. 그 예로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비롯하여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1987년 김현희에 대한 대한항공 858공중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테러를 자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과 서해 5도교전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협을 주려고 시도한 사례가 있다.

북한의 테러의 특징을 보면 첫째,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테러로서 북한은 변함없이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 최고지도자의 지휘 하에 전문적인 특수공작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직접적인 테러대상이 주로 남한에 국한되고 있다. 셋째, 국제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폭력수출을 자행하고 있다(조기형, 2009: 147). 만약 북한이 테러를 자행한다면 그 유형은 북한 자체의 특수공작요원들을 이용한 테러,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테러, 국내 좌경세력들을 이용한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테러의 실행방법으로는 북한 특수공작원에 의해 생화학테러, 핵관련 테러, 사이버 테러를 중요 국가·군사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제 테러단체와 국내 좌경세력을 이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에 테러를 자행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재욱, 2006: 290). 북한은 테러를 자행할 만한 많은 양의 화학 및 생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김두현, 2007: 291).

## 3) 국제테러단체의 테러위협

오늘날 전 세계는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국제교류의 확대에 따라 전통적 개념의 국경이 사라지고 인적·물적 교류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진 지구촌의 시대를 살고 있다(최진태, 2009: 37). 따라서 현대의 테러도 국경을 초월하고 이를 위한 조직들도 국제화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해외거주인, 근로자와 해외 유학생 및 여행자 등의 증가와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 활동 등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제외공관 시설과 인원 및 회사를 대상으로 국제 테러단체로부터 테러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과 직접 관련된 최근의 국제 테러의 동향은 대부분 해외에서 근로자나 관광객 및 봉사단원 등에 대한 인질납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9.11 테러 사건의 배후인 오사마 빈라덴은 미국을 후원하는 모든 국가를 적으

로 규정하고 보복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반테러 국제연대의 참여로 인해 빈라덴의 조직인 알카에다 소속의 테러리스트와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조직원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김두현, 2005: 25).

이러한 정황들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항공기나 해외의 한국 공관, 교포, 관광객 등이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봉사단원 납치사건 등 10여 차례 크고 작은 테러사건이 있었다.

<표 3> 최근 테러로 인한 한국민의 주요 피해사례

일 자	테러의 주요내용
2009.3.15	예멘 하드라무트 교대유적지 지방 관광명소 카잔언덕에 관광 및 사진촬영 후 내려오던 중 자살폭탄테러가 발생, 우리 관광객 4명 사망, 3명 부상
2009.1.3	러시아 모스크바 부쉬킨 언어대학교에서 외국인 혐오단체인 스킨헤드가 우리나라 유학생들 뒤에서 액체인화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도주, 얼굴과 어깨 등에 2도 화상.
2008.11.26	인도 뭍바이 시내 호텔, 기차역 등 10개소에서 연쇄 총격, 폭탄테러가 발생하고 타지마할 호텔에 무장 세력이 난입, 한국인 26명이 억류되었다 5시간후 탈출
2008.9.20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소재 메리어트 호텔 정문에서 자살 차량폭탄테러가 발생, 60명 이상 사망하고 한국인 1명 등 257명 부상
2007.7.19	아프간 가즈니 카라바그 지역에서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 20명과 선교사 3명 등 23명이 탄 버스가 탈레반에 의해 탈취, 전원 피랍 후 2명 살해, 협상을 통해 8.13 여성 인질 2명이 석방인질 이어 8.29~30간 남은 인질 19명 추가 석방.
2007.2.27	아프간 바그람 소재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 아프간 현지인 기능공 집체교육 대상자인솔 및 출입조치를 위해 현장에 있던 다산부대 통역병 하사 윤장호 사망
2006.4.24	이집트 시나이반도 다합지역에서 3건의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 외국인 3명 포함 23명이 사망하고 한국인 등 62명 부상
2005.10.1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섬 쿠타헤변 및 짐바란 해변 소재 3개소의 식당에서 1시간 사이에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일본인 호주인 외국인을 포함하여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외국인 관광객 6명 등 100여명 부상
2004.5.31	이라크 주재 가나무역 김선일이 저항세력에 피랍, 6.22 팔루자 인근 도로변에서 참수된 시체로 발견

\*출처: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자료(www.nic.go.kr).

## 2.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 실태 및 문제점

해외 파병부대 전개이후 국내에 침투한 국제테러 연계세력 등이 주한 외국공관 및 시설에 대한 테러기도 첩보와 다양한 테러위협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테러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국가중요시설 및 이라크 파병국가, 지원국가의 공관, 테러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정부의 주요시설 외국공관 등은 대비태세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대중교통시설, 대형빌딩, 방송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실제 상황발생시 대처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미비점의 보완과 테러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아직 여러가지 이유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김두현, 2007: 292).

### 1) 대테러 관련입법 추진 문제

뉴테러가 전 세계를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각국은 독자적 정보력에 의한 대응체계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테러의 공포로부터 해방을 위하여 형사법, 행정법 등의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가 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망라된 법제정을 시도함으로써 효율적인 대테러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최철영, 2003: 59-111).

그런데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은 첫째, 테러개념<sup>3)</sup>의 모호성이다. 동법 제정은 ‘테러’라는 개념 정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안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 및 테러집단 등의 개념정의를 모호하다는 점이다. 둘째, 동법 제정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외국 입법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이다. 셋째, 대테러기구의 문제점이다. 동법의 제정은 곧 국가정보원의 기능이나 권한이 확대 강화될 것이라는 인식은 동법의 제정을 반대하는데 가장 큰 이유로 제공하고 있다. 넷째, 군 병력 동원의 문제점이다. 동법 제정을 16대 국회부터 시작되었던 시도는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동법의 제정은 과거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과 집중된 권한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점이다(조재현, 2009: 18-31).

### 2) 다중이용시설 테러현장 위기관리의 문제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고 국내에서의 테러위협 역시 발생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연성목표물인 수도권의 지하철과, 전철, 호텔, 백화점, 지하도 상가, 공항시설

3) 테러와 관련한 ‘테러리즘’의 용어는 김석우, 국제테러리즘의 분석-수단적 속성을 통해본 대테러리즘의 한계-,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정형근, 국제테러리즘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원, 1992; 권문술, 테러리즘과 국제사회, 동아원색대백과사전 제31권, 동아출판사, 1992; 국가정보원, 재외국민에 대한 국제테러리즘·범죄위협, 2000년도 테러경세, 국가정보원, 2000; 국방부, 국제테러리즘, 국방부, 2001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은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테러리즘, 대영문화사, 1997과 동저,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2006에서이다.

대합실 등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테러는 아니지만 실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불과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343명이라는 대량 피해를 발생시킨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화재발생 시 위기현장 대응활동에 참여한 조직은 대구지하철 공사, 소방기관, 응급의료기관,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이었다. 이들 조직들의 현장 대응활동을 분석한 결과 위기관리체제의 내외적 요인들이 이들의 ‘기능과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대구지하철 화재가 단순한 방화사건에서 위기로 발전하게 된 것은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외적요인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둘째, 전문 대응조직 및 소방장비의 부족이라는 위기대응체제 내부적 요인도 위기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구지하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증가한 이유는 화재발생 시 현장이 지하공간이라는 상황적 특성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넷째, 위기현장의 대응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조정통제 등 위기현장의 통합지휘체계상의 문제점들도 위기대응활동에 방해요인이었다. 다섯째, 법제도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대응활동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의 경우 전동차에 대한 안전은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소방관련법’의 규정에서 제외되어 차량의 제작단계에서 소방조직의 참여가 차단되어 있다. 그리고 역사 등 지하철 관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의 결정단계에 소방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행정자치부, 2003: 471). 이결과, 화재발생에 대비한 승객대피, 인명탐색구조, 화재진압대책 등 종합적인 소방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위기현장에서 대응활동간 나타난 문제점은 위기에 대한 인식부족, 위기현장 대응조직의 전문성 문제, 위기현장 통합지휘체계상의 문제, 위기관리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들 수 있다(이채순, 2007: 148-151). 위기에방정책측면에서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인구 밀집시설과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이 강도 높게 이루어져 왔으나, 대구지하철의 경우 방화범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지하철을 탑승하여 테러에 준하는 방화를 너무나도 손쉽게 자행할 수 있었다.<sup>4)</sup>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주최 측은 공경비 위주로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오현득, 2005: 44-45) 연성목표물인 극장이나, 백화점, 지하철,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테러 대비가 무방비상태라고 본다. 한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가 그동안 없었으나, 외국에서는 2002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오페라극장 문화공전의 인질테러사건

4)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관리하기위해 2004년 7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 위기관리기본지침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하였다. 이 기본지침은 정부부처 및 기관의 위기관리업무의 기본문서가 될 기본지침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30종을 제정해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으로 관람객 129명 등 170명이 사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2003년 7월 모스크바 야외 록 콘서트장에서는 체첸반군의 자폭테러로 16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03년 5월에는 체첸 구테르메스 이슬람 사원의 자폭테러로 30명이 사망한 사건 등을 들 수 있다(김두현, 2004: 7-36). 이와 같이 테러리스트들은 점차 시설방호가 취약하고 테러가 용이한 시장, 극장 등 대형건물 같은 연성표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국제행사, 지역행사,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테러 안전대책이 사전 예방적이지 못하고 장비나 대처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태이다.

### 3)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 설계 및 신종 IED위협 대비 문제

과거 전통적 테러가 1995년 4월 70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와 같이 공공건물, 특히 핵심기반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했던 반면, 2001년 9월11일에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테러, 2005년 7월 영국의 런던 킹스크로스역 폭탄테러, 2008년 9월 파키스탄의 메리어트 호텔 폭탄테러, 그리고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 시내 동시다발 연쇄폭탄 테러사건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국제적 테러사건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호텔, 역, 극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근 10여 년간의 사고를 보더라도 1995년 서울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 폭발, 1999년 화성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여서 수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재산적 손실이나 인명피해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막대한 사회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테러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테러의 목적상 불특정 다수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이 테러 등을 대비한 예방설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1년 9.11테러사건이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항, 철도·지하철역사 등의 교통시설과 대형 쇼핑물 등 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테러위협이 상존하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 테러 예방설계지침 개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테러위협에서 비교적 안전했던 국내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설계의 개념정립 조차 전혀 되어있지 않으며, 더욱이 테러예방을 위한 건축물 설계기준이나 설계지침 등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거의 없었다(이경훈, 2008: 15). 다만 최근 초고층 건물의 테러예방설계를 의무화한 서울시의 방침이 내려진바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다중이

용시설의 테러 예방설계지침을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포함시켜 건축 심의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테러예방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테러예방 차원에서 본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점은 첫째, 다중이용시설 도심지 밀집화이다. 테러예방 설계인 3선방어에서 이격거리 확보의 문제와 진출입로의 증가로 인한 접근통제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와 복합화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공간구조 인지에 어려움이 있고 대형화와 복잡화의 경향으로 테러예방을 위한 진입 통제 및 이상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초고층의 문제점이다. 수직연결 공간 및 공조 시스템을 통한 화재 및 연기, 열의 잔류로 인명피해가 가중되고 내부 공간구조의 인지가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이경훈, 2009: 125).

이와 같이 다중이용시설물 테러 예방차원에서 설계가 고려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듯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설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신종 급조폭발물<sup>5)</sup>(IED)에 의한 테러는 자살폭탄 공격이다. 사람의 몸이나 차량에 폭탄을 지니고 목표지점에서 자폭하는 형태의 행위로서 최근 들어 중동지역 테러리즘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IED에 의한 국내 테러위협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 중 1983년 9월 대구 미문화원사건,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사건, 1987년 11월 KAL폭파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오사마 빈라덴을 북한에서 테러훈련을 시켰으며, 레바논 스리랑카 테러조직에 무기 제공 의혹, 팔레스타인 테러조직은 북한 사주로 김포공항 폭탄테러를 자행하려 했다(김응수, 2008: 27).

그리고 IED는 국내에서 폭과자재류를 실제 사용 했는가 실험 확인이 어렵고 무단 방출 등으로 관리에 취약하고 군부대 주변 탄약류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등 누구든지 IED 제조물질을 획득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제조하여 무분별하게 유통하고 있는 실태임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합동참모본부, 2009).

#### 4) 다중이용시설 테러현장의 초기대응 문제

현대의 테러는 2008년 인도 뭄바이 테러사건과 같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일반대중이 운집한 지하철,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점에서 주목해야 하고 대량 인명피해를

5) 급조폭발물(IED)이란 테러세력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공약품, 전쟁유기탄, 침단장치 등을 이용하여 필요시 사용하도록 만든 폭발물과 장치를 말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재료조달과 설치가 용이하며 심대한 피해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요인을 들어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라크전에서 IED에 의한 미군 사망자는 총 사망자 대비 급증하고 있다. 2003년 총 사망자 486명 중 IED에 의한 사망자 68명(14%), 2004년 총 사망자 848명 중 IED에 의한 사망자 197명(23%), 2005년과 2006년 48%, 49%로 증가하고 있다.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초기대응의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테러 사례는 2005년 도쿄 지하철역에 음 진리교 신자에 의한 사린독가스 테러사건과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같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초기대응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테러상황이 발생하면 테러현장의 초기대응의 총 책임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으며, 초기대응팀의 구성은 경찰, 소방서, 군(軍), 보건소로 편성되어 있다. 테러가 발생하면 관할지역에 편성된 초기대응팀이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황 진전에 따라 관련기능별 부처에서 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되어 민·관·군 통합으로 대테러작전이 이루어진다. 다중이용시설에 생화학테러가 발생한다면 단계별 작전을 실시하는데 1단계는 시설주에 의한 초기 대응, 2단계는 지역관할부대, 경찰, 소방서, 행정관서에 의한 긴급제독, 3단계는 군 화학부대에 의한 정밀제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생화학 같은 테러가 발생 시에는 일반테러 보다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하지 못한 이유는 몇 분 이내 대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발생지점의 접근통제, 긴급환자 병원이송, 교통통제, 오염 확산방지, 추가피해 발생방지 등이 단시간 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초기대응 기관이 서로 상이하고 거리가 이격되어 있으며 총 책임자 및 초기대응인원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민·관·군 통합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합동참모본부, 2007: 62).

또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발생 시에도 가장 큰 문제가 초기대응 이었다. 화재발생 초기에 객차 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와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충분히 화재를 진화할 수 있었지만 지하철 관계자들은 그 누구도 화재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짙은 안개와 유독성가스로 승객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아비규환이 되어 있는데도 전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전동차, 송풍기, 환풍기 등 기기조작에만 집착한 나머지 초기대응 시기를 놓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승객대피에는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는 결국 인명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활동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이채순, 2007: 131).

따라서 테러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 초기대응 조직 인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실제훈련이 부족하고 책임자의 현장통제능력이 미흡하다. 그리고 관련조직 및 장비편성도 검토가 요구된다.

##### 5) 다중이용시설 테러현장의 경찰 및 소방 안전관리 문제

세계무역센터(WTC)의 110층 건물에 대한 9.11 테러로 인해 2,973명이 사망하고 그중에서 소방관이 343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보아 한국도 63빌딩, 69하이페리온 빌딩, 신촌지하철역, 강남지하철역, 지하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청와대, 국방부 등 주요 기관들을 상대로 한 DDos(분산서비스거부) 사이버테러 공격이 있었다. 국가기관, 은행이나 기업 등의 전산망을 교란시키거나 정보를 조작해 재난을 야기 시키는 조직적 테러 행위로 그 기법으로는 전자우편폭탄(E-mail Bomb), 서비스거부(Denial of Service), 논리폭탄(Logic Bomb) 등이 있다(김두현, 2007: 203). 이번 디도스는 북한 인민군 정찰국 산하 '110호 연구소'에서 전략적으로 이뤄졌다는 발표가 있었다(김두현, 2008: 408).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에 의해 경찰 및 소방전산정보체계를 마비시켜 출동 및 화재진압 시 정보를 마비시켜 화재진압활동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테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대비책이 요구된다(최진중, 2004: 173).

테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첫째, 재난현장 안전관리 인식 부족이다. 둘째, 표준 안전기준 및 현장 활동 표준운영절차(SOP) 등이 미흡하다(대전서부소방서, 2005: 24-25). 셋째, 안전프로그램 및 안전사고 예방기본정책이 미흡하다. 넷째, 재난정보 관리기능 미약 및 보호 장구·장비의 안전기준이 미흡하며, 안전과 건강을 도외시한 근무환경 및 근무방식이 취약하다. 다섯째,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인식 및 교육·훈련이 부족하다(김두현, 2009: 7).

#### 6) 국내 테러관련 보도 등 정체성 혼란 및 테러위해 인지능력 미흡

9·11테러 사건발생 기간에서의 테러를 일으킨 국가와 정부, 단체 및 범법자에 대한 비판 논조가 많이 나타난 것과는 정반대로 아프가니스탄 공격이나 이라크 전쟁이 아무리 보복공격이라 해도 그것은 엄연히 테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쟁행위를 일으킨 국가와 정부에 대한 비판논조<sup>6)</sup>가 적었다는 것은 서구 언론의 보도태도와 전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종전에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으로 미국중심의 외신 및 학자들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인용 보도 및 전파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면에서 언론의 공정성과 학자로서의 기풍이 결여된 경향이 있었다. 즉 이라크인 및 팔레스타인에 의한 공격행위는 테러로 규정하여 표현되고, 이스라엘의 공격행위는 응징보복 행위로 정당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이라크인에 의해서 자행된 공격행위는 어떤 측면에서는 저항 세력에 의한 자위권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엄효식, 2003: 119).

6) 2001. 9. 11부터 2004. 9. 12까지 서울에 위치한 중앙종합일간지 10가지 신문에 게재된 사설은 총 26,266개로 그 가운데 테러관련 사설은 모두 345개로 나타났는데 테러리즘에 대한 비판논조의 사설을 가장 많이 게재한 신문은 중앙일보(21개)였고, 이어서 문화일보(16개), 국민일보(13개), 한겨레신문(10개), 경향신문(10개), 조선일보(9개), 동아일보(7개), 서울신문(5개), 세계일보(5개), 한국일보(5개) 순으로 나타났다.

## V. 한국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안전대책

### 1. 테러방지법 조기입법과 대테러센터장 직위신설

테러방지법은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입법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안에서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되 국가 대테러센터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별도의 독립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부총리급 대테러센터의 장을 두고, 그 산하에 대테러 기획과 정보융합조직을 신설하여 각급 정보기관에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대테러작전을 기획하는 조직과 기능을 편성하여 행정부의 관할부처를 조정·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다중이용시설 현장위기관리 시스템의 정립

대테러 활동의 기본은 예방적 활동에서 출발한다. 사전예방 활동은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안전 관리대상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강하는 등 테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며 개인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테러발생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대구지하철 화재발생 시에 많은 위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교훈삼아 실제 지하철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첫째, 국민의 안전의식 및 위기 대응능력 향상이다. 둘째, 위기현장 대응조직의 전문능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대규모 상황을 많이 경험하도록 위기상황에 맞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올바른 상황 판단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기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이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군, 응급 의료기관, 경비회사 등 많은 관련기관들이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기현장 통합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부분과의 협력강화이다. 자원 봉사 단체나 NGO 등 민간부분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중 매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 정책과 제도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관리정책이 부분적 통합관리를 하여 위기관리정책 집행구조의 다원화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 그리고 정책 상호간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초기대응체계와 실질적인 현장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위기현장 대응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주요 국제행사인 월드컵, 올림픽, 피스컵코리아 국제축구대회, 세계청소년 월드컵축구대회, G20정상회의 등을 개최 시 경찰에 의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역 행사나 호텔, 지하철, 극장,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호태세가 취약하다. 이를 위해 사 경비를 적극 도입하여 전문적인 안전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최근 범죄예방 및 재난방지 등을 위해 CCTV 등 보안감시 장비를 활용한 대테러 방어체계구축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3. 다중이용시설 건축적 대처 및 신종 IED위협 대책 강구

한국은 도심의 밀집화, 건물의 대형화·복합화·초고층화·지하화로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 및 피해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건축적 대책은 사전에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점에서 대책과 일단테러가 발생 할 경우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 예방을 위한 건축 계획적 방안이다. 이는 부지경계 및 배치계획을 부지 모든 면으로부터 최소한 9m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부지 내에서도 차량의 동선이 건물로부터 9m이상 이격해야 한다. 또한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테러가 발생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축 계획적 방안이다. 건축물 형태 및 입면계획은 가급적 단순한 형태로 하고 실내 공간 및 피난계획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초고층은 중간에 피난층을 설치하고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종 IED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On-Off 라인 상 인적·물적 취약요소를 색출할 수 있도록 관·군 합동으로 IED 제조가능 물질의 외부유출을 차단해야 하고 테러리스트와 IED 제조우려자 등 취약한 인물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전에 징후를 조기식별하고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대(對) IED에 대한 관련한 모든 것을 통합 D/B를 구축하고 폭발물을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실험 및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4. 다중이용시설 테러현장의 초기대응태세 확립

테러사건이 발생할 시에는 대량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책임부서는 시설주이므로 먼저 임무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하고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초기대응 할 기관이 경찰, 소방서, 군(軍), 보건소인데

실제 위치하고 있는 거리에서 빠른 시간 내 도착하기 어려우므로 현장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기관이 먼저 도착하면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관련기관이 타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배양해야 하고 매트릭스<sup>7)</sup>에 의한 통합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초기대응의 총 책임자는 관할 경찰서장이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주기적인 통합훈련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테러현장에서의 초기대응을 위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4조에 의하면 테러사건 발생 시에 무력진압작전을 위해 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에 편성된 대테러특공대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동 규정 제30조에서 명시한대로 생화학테러가 발생 시에는 소방방재청 긴급구조대가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생화학테러가 발생하면 단시간 내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국가화생방대테러특공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비 전문기관인 소방방재청 긴급구조대가 그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전문능력, 장비확보 등 많은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서 일반테러보다 더 많은 위험과 피해를 가져올 생화학테러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에 국가화생방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는 방안과 현재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국방부 24화학특임대대를 군사시설만 담당하는 것을 국가 전체를 담당하는 국가화생방대테러특공대로 격상 지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생화학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국방부 24화학특임대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방방재청에 신설하는 것보다 현 국방부 24화학특임대대를 국가 전체를 지원하는 국가급 화생방대테러특공대로 격상하여 지정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

## 5. 다중이용시설 테러현장의 경찰 및 소방안전관리 개선

첫째, 초고층빌딩의 화재대응 원칙 및 대테러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이다. 사실 소방대원에 의해 지상 80층 이상의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초고층빌딩의 본질적인 리스크인 것이다. 초고층빌딩 화재에 있어서는 ‘자기가 진압하고 자기 스스로 피난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나 방연문 등 기계적 방재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며, 몇 개 층마다 소방설비계를 독립시켜 배치하고 배연시스템을 병용하여 빌딩의 양 측에 피난계단과 각층 화장실에는 피난사다리를 설치하고 각 7개 층 정도마다 안전한 피난 스페이스를 설치하는 등 재난시 방재설비의 타격을 생각해서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어 입주자 또는 종사자들에 대한 사전 충분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 둘째, 경찰 및 소방

7) 여기서 말하는 매트릭스란 초기대응 할 기관이 상황별, 상호기관별, 시간대별, 임무별 조치할 사항과 협조할 사항을 사전에 토의 및 훈련을 통하여 제작된 파일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 관련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조치하게 되므로 적시적이고 통합적으로 작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환경의 능동적 대응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셋째, 안전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넷째, 재난현장 표준운영절차 및 안전기준 등 안전정책을 개발한 것이다. 다섯째, 우선 건물붕괴에 대한 사전 예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물 붕괴 등 안전자료 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섯째, 현장 지휘통제 및 재난 정보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일곱째, 경찰 및 소방 장구·장비의 표준 안전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여덟째,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경찰관 및 소방관의 전반적인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개발하여 공사상자의 지원, 개인 및 가정문제, 스트레스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중한 2~3교대근무 방식의 개선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국가 노동정책과 연관된 중요문제로서 개선방법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하루속히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 6. 대국민 홍보·교육 시스템 개발 및 테러위해 인지능력 배양

긴밀한 시민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력이 대테러에서는 절대적인 요소로,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의 비합리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국가의 관리 기본지침과 대테러 관련법 및 테러발생 시 유형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언론, 방송에서도 너무 오락적 위해, 광고적 위해에만 치우치지 말고 교육적 기능, 비판적 기능, 보도적 기능 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은 정규교과 시간이나 재량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조희나 종례시간을 이용하는 전달이나 권고의 형태 또는 시기에 따라서 특별한 행사로서 실시하고 있다.<sup>8)</sup> 이번기회에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명선 외, 2003: 85).

또한 인지과학의 발달로 발견되어진 사고시스템을 통해 형법상 행위에 대한 테러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테러 위해행위에 대한 시각이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즉, 테러 위해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위해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과학적·예방적 테러 안전대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며 이러한 인지과학적 관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김두현 외, 2008: 33).

따라서 경찰청은 이상과 같은 테러위해요소에 대한 인지과학에 대한 강의 및 연구를 통해서 사전 예방적 테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테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범인을 연구하는 범죄학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학

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초등학생은 87.4%, 중학생은 72.4%, 고등학생은 56.4%순으로 안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초등학생에서 가장 높았다.

도 중요시 여기는 만큼 테러대상자의 보호와 그 테러환경의 연구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 7.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한 3D SICS 개발운영

다중이용시설물의 관리자는 시설물 내부에서의 사건·사고예방, 이용객의 안전보장, 재난 발생방지 등을 위해 수많은 상황정보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때 수집된 상황정보들은 발생위치, 내용, 시간 등에 의해 구분되고 구체화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각 실들의 위치와 구조 등을 보여주는 공간정보, CCTV, 각종 센서, 보고체계, 경보체계 등을 사용해서 발생한 상황정보의 신속 정확한 인식과 전파 등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때 공간정보는 다중이용시설물의 내부공간정보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물 주변의 외부공간정보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입체 기반이벤트 공간정보관리시스템(3 Dimensions Spatial Event Information Control System)과 같은 개념(안병주 외, 2008: 125-135)이 필요하다. 9.11테러와 같은 고층빌딩이나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같은 지하철에서와 같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에서 이용객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기반(technology-based)시스템과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의 활용 등을 통해 재난 관리자에게 인간이동감지 및 이벤트 분석 등 의사결정체계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것들을 활용하여 최적의 피난경로 탐색, 피난지시, 피난지시에 대한 피드백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테러 및 재난방지를 위한 관리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관리자들이 범할 수 있는 인적과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테러는 미국, 중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더욱 극렬해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이들 까지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테러의 안전지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그 어떤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도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들어 주목할 현상은 1995년 700여명이 사상자를 낸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와 같이 과거의 테러는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테러,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 시내 동시다발 연쇄폭탄 테러사건 등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국제테러사건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인 지하철, 호텔, 극장, 백화

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는 국내 테러와 북한에 의한 테러, 국제 테러단체로부터 테러가 예상될 수 있다. 또한 현대테러의 양상을 볼 때 테러는 특정요인을 노리는 형태보다는 다중이용시설 및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여 국제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2010년 G20정상회의의 한국개최와 아프간 추가파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APEC, ASEM, 2002 한·일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다중이용시설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다자간 국제회의의 안전 활동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는 ① 제 안전기관간의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과 사용, ② 안전기관별 사전협의와 검토를 통한 정확한 인력산출, ③ 주요 취약시설 점검을 위한 최신 검측장비의 도입 및 유관기관 합동반 구성, ④ 경찰 및 소방업무 효율화를 위한 위험물취급회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보 및 사경비요원·청원경찰의 특수교육을 통한 근무체제 강화, ⑤ 국제회의의 안전 활동 유경험자의 데이터베이스화 관리 활용, ⑥ 국내·외 정보기관과의 대테러 공조를 위한 정보시스템 확립, ⑦ 제 안전기관의 통합적 홍보기구설치 및 홍보대책 수립 등의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이선기, 2007: 236-239).

둘째, 선진국가인 미국과 같이 테러방지법의 조기입법과 장관급이상의 대테러센터의 장직위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테러의 예방과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위기관리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축적 대처방안과 신종 IED위협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다중이용시설 테러현장에서의 초기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 및 소방안전관리도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대국민 테러위협 인식변화와 홍보·교육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테러의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테러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곱째, 다중이용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3D SICS와 같은 과학적인 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테러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보여 진다. 그러므로 대테러의 성공을 위해 평상시부터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실질적인 국가위기관리체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고재욱(2006), “화학공장테러사건의 예방 및 대응”, 「대테러 연구논총」, 제3호, 290.
- 권혜림(2009), “국제테러리즘의 변화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3호, 32.
- 국정원(2009), 테러정보통합센터 자료
- 김두현(2009), “테러현장의 소방안전 연구”, 7.
- \_\_\_\_\_ (2008), 「경호학개론」, 엑스퍼트, 408
- \_\_\_\_\_ (2007), 「현대사회문제와 안전관리」, 엑스퍼트, 186~292.
- \_\_\_\_\_ (2005), “최근 국제테러의 양상에 대비한 한국 테러예방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0호, 한국경찰학회, 1. 25.
- \_\_\_\_\_ (2004), “테러리즘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 연구”, 경찰청 「대테러연구」, 230.
- 김두현·손지영(2008),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필요성 고찰- 과학적·예방적 사회안전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33.
- 김응수(2008), “테러리즘의 초국가성 확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8. 27. 81.
- 대전서부소방서(2005), “현장 활동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방안”, 소방행정연찬대회 발표자료, 24~25.
- 미 의회(2004), 9.11 테러 최종보고서.
- 박동균(2009), “지방 자치단체의 테러대비위기관리 전략”, 국가위기관리학회 발표자료, 31~ 32.
- 박철기(2007), “다중이용시설물의 피난유도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4.
- 법제처(2009), 「대한민국 현행법령집39(III)」, 한국법제연구원. 241~243. 905~917
- 안병주·윤자영·김재준(2008),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의 흐름관리를 위한 3D 기반 공간 이벤트 정보 관리시스템의 개념 제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9(2), 125-135.
- 오현득(2005), “국제행사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4-45.
- 이경훈(2009), “다중이용시설 발전동향에 따른 테러위협 대비방안”, 민·관 합동대테러 학술세미나 자료집, 112. 125.
- \_\_\_\_\_ (2008), “다중이용 시설 테러예방 설계 기준 및 설계기법 개발위한 기초연구”, 치안정책연구소, 15. 108.
- 이명선 외 3(2003), “학교 안전교육 실태 분석을 통한 안전교육 개선 방안 연구”, 세이프키즈코리아 발표자료, 85.
- 이선기(2007),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 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236~239.

- 이창용(2007),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대영문화사. 110.
- 이채순(2007), “위기현장 대응조직의 위기대응 활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131. 148~151.
- 임철순(2003), “세계적 자폭테러와 한국”, 경찰청, 대테러연구, 26, 104~105.
- 엄효식(2003), “이라크전과 공보작전” 육군본부, 군사연구, 119.
- 오현득(2005), “국제행사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위협요인이 국제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44~45.
- 조기형(2009), “아·태지역에서의 비군사적위협과 한국군 변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대학교, 147.
- 조재현(2009), “테러방지법의 제정 방향”, 「테러방지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테러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18~31.
- 최진중(2004), 「소방학개론」, 형설출판사, 173.
- 최진태(2009),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국내 테러위협 환경의 변화”, 민관합동대테러 학술세미나 자료집, 37.
- \_\_\_\_\_ (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110.
- \_\_\_\_\_ (2004), “한국의 대테러 발전 방향”, 한국테러리즘연구소, 2.
- 최철영(2003), “미국의 테러 관련 법제 연구”, 「대구법학」, 제6호, 59~111.
- 한국방위산업진흥회(1998), 국방과 기술, 1월호, 28.
- \_\_\_\_\_ (1997), 국방과 기술, 12호. 52.
- 합동참모본부(2009), “합동 대 IED 발전 세미나 발표자료”.
- \_\_\_\_\_ (2007), 「합동 화생방작전지침서」. 62.
- \_\_\_\_\_ (1999), “코스보 전쟁 종합분석”, 44.
- 행정자치부(2003), “국가 재해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471.

## 2. 국외문헌

- U S, Department of State. Country report on Terrorism 2006. 2007.
- Kargl, Walter, Handlung und Ordnungim Strafrecht: Grundlagen einer kognitiven Handlungs und Straftheorie, Berlin: Dunker&Humblot, 1991, S.514.

## 3. 기 타

- 국민일보, 2010. 2. 10: 6면
- 동아일보, 2009. 12. 5 : 6. 14면
- <http://www.naeil.com>.
- <http://www.nis.go.kr>.
- <http://www.police.go.kr>.

## Abstract

### **Counter-terrorism Safety Measures in Public Facilities**

Kim, Du-Hyun · Ahn, Kwang-Ho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he motives and objectives of terrorism that have been targeted at hard targets such as key national facilities have now shifted towards soft targets such as subways, department stores, and tourist hotels; the attacks on these soft targets are steadily increasing. Simultaneous, unconventional, and indiscriminate terrorist attacks on civilians has also increased.

In November, 2010, nearly forty states of the G20 and B20 (Business 20) will join in international summits to be hosted in Seoul. This coming July, an additional 350 troops will be deployed to Afghanistan for the sustainment of public security. Such events are sensitive topics,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errorist movement.

Korea has successfully hosted various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APEC and ASEM Summits, and the 2002 Korea-Japan World Cup. The experiences from these events must be applied to ensure the safety of public facilities against the dangers of terrorism.

First, counter-terrorism center must be established for the long-term, above the General Officer level to ensur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multilateral, international summits, as well as promoting policies and legislation aimed at preventing terrorism. Second, a terrorist threat management system must be secured and safety measures must be emphasized. Third, a fundamental structure must be established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on public facilities, as well as legal and government action against the new threat of IED. Fourth, the police and fire fighting networks' must have a firm rapid response posture on the scene of an attack. Fifth, the state of mentality on the recognition of terrorist threats must be changed and restructured by promoting to and educating the population. Sixth, prevention measures must be established via research and academia. Seventh, for the guarantee of security in public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should employ cutting edge technology such as the 3D SICS and further develop and apply such technology.

All methods and resources must be fully utilized for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terrorism prevention measures.

Key Word : Public Facilities, Supernational Terrorism, Terror Surrounding, Soft Target, Terror Safety Countermeasure

논문투고일 2010. 1.31, 심사일 2010.2.15, 게재확정일 2010.3.17